

이흥재의 세상만사



본설고문

나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생명이 다하니깐요. 사람들이 나에게 눈길을 주는 시간은 짧으면 몇 분, 길어야 한두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내 몸을 대충 살피고 나서 곧바로 나를 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버림을 받아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 속에 나를 돌돌 말아 꼭꼭 눌러 넣어 주변 원형 유지는 물론 신발 냄새도 없앨 수 있고요. 사람들이 큰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할 때 내가 요긴했던 화려한(?) 과거도 있습니다. 이때도 애국자들은 국내지보다는 영자지를 이용했지요. 지금도 혈기 방장(血氣方壯)한 청소년들은 넘치는 기운을 어찌지 못해 물레방바다에 나를 깔아놓고 정기(精氣)를 분출하며 철마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뿐인가요. 서예가들은 화선지에 글씨를 쓰기 전에 우선 내 몸에 수많은 습작을 해 봅니다. 화가들은 나를 발기발기 찢어 콜라주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요. 이때 비록 내 한 몸 찢기는 아픔이 있을망정 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안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매일 만나는 분들이 나에게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음으로써 어엿한 지식인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나의 이름은 신문입니다.

내가 1952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처음 전

남일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980년 12월부터는 광주일보란 이름으로 개명한 이후 매일 세상 사람들과 만난 지 올해로 63년째입니다. 그동안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제 날짜로 드디어 지령 2만 호를 기록했습니다.

지령(紙令)이란 신문의 나이 즉 신문이 창간된 이후로 발행한 호수(號數)를 뜻합니다. 광주일보의 지령 2만 호 돌파는 호남 지역 최초이자 전국 일간지 가운데서도 열두 번째의 대기록입니다. 모두 애독자 여러분 덕택입니다.

나립한 지역 언론의 현주소

하지만 현재 광주일보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은 그리 낙관하지 않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재정난을 겪다가 급기야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은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사주(社主)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 대여섯 군데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혀 왔습니다.

과연 광주일보는 그 누구의 품에 안길까요? 이와 관련해 우선 말씀드릴 건 건설업체의 인수에 바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주·전남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건설사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결국 부실언론이 되고 말았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입니다.

건설업체와 신문사의 만남 왜 위험한가

광주일보 노조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법원이 인수자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주체인 노조는 최근 인수 의향을 보인 업체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엔 신문사 경영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하려는 모든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문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의견서에는 광주일보가 잠시 대주건설에 넘어갔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대목도 있습니다. “...대주건설은 ‘건설업’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언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으면서 광주일보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골프장을 조성한 뒤... 광주일보를 오히려 부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략 3년 전부터 경영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간신히 정상체제로 가는 듯했으나 지난해 8월 계속되는 골프장 회원권 대금 반환 요구에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이런 아픈 경험이 있기에 노조는 특단의 방안이 없는 한 신문사를 수단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경우 투자의향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체 중에는 다수의 건설업체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의견서의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1980년 이후 7년간 유지됐던 ‘1도1사’ 제도가 폐지됐고, 광주·전남 지역에도 우후죽순

으로 건설사들이 참여한 신문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신문사의 저임금 구조를 정착시키고 건설업의 문제점을 숨긴 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언론을 이용하면서 언론의 논조에도 심한 왜곡현상을 낳았습니다. 건설업과 신문사의 만남은 건설업의 부도, 지역 신문산업의 몰락 등 부작용만 낳았으나 그 구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한국일보도 당초 여러 군데의 기업이 인수 의향을 보였으나 건설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 기업인 언론을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맡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광주일보 새 사주가 되려면

광주일보 창업주로서 당시 광주의 3대 인물로 불렸던 남봉 김남중 전 회장을 생전에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신문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은 2대 김종태 회장이 마찬가지여서 오로지 신문 사업만을 고집하며 언론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지자 김 회장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넘기면서까지 신문만큼은 살리고 애썼습니다. 이제 광주일보의 새로운 사주는 신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편집권을 보장

하고 사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언론이 정론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분이여야 하겠습니까. 굳이 동아일보의 인촌 김성수, 한국일보의 장기영 선생 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신문사의 사주는 그 신문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적 기업인 언론사의 경우, 사주의 언론에 대한 애정과 철학 그리고 신념 등을 두루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 M&A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주의 편집권 독립 의지 등이 평가에서 주요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 인수금액이 신문사를 위해 건강하고 올바르게 쓰여야 합니다.

광주일보는 이 지역 언론의 역사와 전통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호남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대표 언론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경영상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63년 전통을 기반으로 언론 본연의 자체인 정론을 펴면서 제도약할 수 있도록 애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새 소식 하나가 들어왔네요. 광주일보 노조가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들의 총의(總意)를 모으겠다는군요. 언론 경영에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의 지역언론 환경을 볼 때 또다시 부실언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판단이라 여겨집니다.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위기

현재 “해직교사 조합원 아니다”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노동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며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동법) 2조에 대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전교조가 설립 이후 10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와 자적이 없는 조합원 수나 이런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 노조가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최종적으로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이날 현재 결정으로 전교조 측



28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게 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현재

의 합헌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교조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화전당 전담조직 서둘러 꾸려야”

광주 문화·시민단체들 촉구

광주지역 문화, 시민단체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전담 운영조직의 조기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미협, 참여자치 21, 지역문화교류포럼, 남재단 등 5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에서 “문화전당 개관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도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첫 출발인 전담조직 구성이 정부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광주일보 27일자 1·3면)인 것으로 알려져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당의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운영의 단초가 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데 정부가 협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줄길 바란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콘텐츠(공연·전시,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준비와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최종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자진사퇴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됨으로써 문화전당 개관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추진

정부가 9월에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50개 기념 사업을 확정했다. 정부는 7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9월3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하기로 했다. 현재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리모텔링을 하고 있다. 청사 개관일에는 총칭에서 상하이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한중 자전거 행진대’이 합류한다. 총칭 임시정부 청사는 11월17일에 문을 연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림’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층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안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522.3㎡(158,15평)

연 면 적: 2,073.86㎡(627.96평)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